

# 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2013. 9

김민형

- 문제 제기 ..... 4
- 우리나라 ODA 현황과 언타이드화 추진 동향 ..... 5
- ODA 언타이드화가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 ..... 14
-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언타이드 원조 도입 및 운용 사례 ..... 21
- 정부의 대응책 검토 및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2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요 약

- ▶ 2010년 1월 1일, OECD DAC의 정식 회원국 가입에 따른 ODA의 언타이드화 확대는 원조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주 기회를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ODA의 높은 구속성 비율로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는 2010년 12월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수립, ODA의 언타이드화 로드맵을 발표함.
  - 로드맵상 2015년까지 전체 ODA의 75%(유상원조 50%, 무상원조 100%)까지 언타이드를 확대하고자 함.
  
- ▶ 우리나라 ODA의 경우 2007년 이후 언타이드 비중이 급격히 증가. 2011년에는 51.1%(약정 기준)가 언타이드로 지원되어 로드맵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
  - 2011년을 기준으로 무상원조의 경우 68.4%가, 유상원조는 46.3%가 언타이드로 지원
  - 현 상황을 볼 때 향후 유상원조의 언타이드화에 따른 영향이 더 커 시공부문에 대한 상대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 현재 ODA 자원 공사가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향후 ODA 자원 공사가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일본의 예를 볼 때, 우리 기업의 수주 비중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ODA는 발주자의 금융 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일 뿐만 아니라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해외 수주 기회 제공
  - 정부는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5%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이미 ODA의 90% 이상이 언타이드인 일본의 경우 전체 ODA 자원 사업 중 일본 기업의 수주 비중은 30% 내외에 불과
  
- ▶ 현 정부 대응책의 경우 대부분 방어적인 대책들로 기술 유출의 부작용도 있음. 따라서 민간과 연계한 PPP 사업에의 지원 및 투자 확대, 기술 협력과 유상지원의 연계 강화, 그리고 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의 확산(수출) 등 보다 적극적인 수주 감소 대책 수립이 요망됨.
  - 정부가 제시한 대응책인 기술 협력,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등이 우호적인 입찰 환경 조성에 기여하나, 수원국 기업의 기술 복제로 현지 경쟁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접적으로 수주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ODA 자금을 통한 출자금 대출, 일부 PPP사업에 차관 제공뿐 아니라 PPP사업을 위한 SPC 지분 투자까지 민간과 연계한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 EDCF 지원사업의 수주 제고를 위한 기술 협력과의 연계, 근본적인 수주 환경 개선 등 필요

## 1. 문제 제기

- 우리나라는 그간의 원조 규모 확대와 원조 효과성 제고 노력 등을 인정받아 2009년 말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sup>1)</sup>에 가입을 신청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공여국 대열에 합류함.
  - 우리나라는 1963년 USAID 자금으로 개도국 초청 연수를 시발점으로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까지는 외교 안보 차원에서 소규모의 지원 사업이 추진됨.
  - 이후 1987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와 1991년 KOICA(한국국제협력단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탄생으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대외 원조의 기본 틀을 갖추고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대외 원조 사업을 시작함.
  - 2000년대 들어 이라크와 아프간 지원,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출연·출자 등으로 ODA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 이후 2010년 1월 정식으로 DAC 회원국이 됨에 따라 2005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2009년에는 기본법을 정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이와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ODA는 그 효과성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높은 구속성 비율이 지적되고 있음.<sup>2)</sup>
- 우리나라는 ODA 사업 추진 시 국내 기업·인력·물자를 중심으로 조달하여 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 비구속성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sup>3)</sup>
-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OECD DAC의 권고 사항을 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2010

1) 현재 개발원조위원회는 23개국 및 1개 기구(EC)로 구성됨. DAC의 23개 회원국들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임.

2) 이 외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국가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ODA 규모와 추진 체계의 다원화도 ODA의 효과성이 낮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3) 관계 부처 합동(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참조.

년 10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적개발원조(ODA)의 비구속성 비율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수립함.

- 이와 같은 비구속성 비율의 확대는 EDCF, KOICA 등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원조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수주 기회를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ODA 지원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이 해외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음. 그러나 언타이드(untied)화 범위가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한 중국 등 개발도상국 기업이나 현지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sup>4)</sup>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ODA의 추진 방향 및 언타이드화 계획을 파악한 후 이에 따르는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 우리나라 ODA 현황과 언타이드화 추진 동향

### □ ODA 현황 : ① 사업 수행 체계

- 현재 우리나라 ODA는 유·무상 지원이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양자와 다자, 무상과 유상별로 다원화된 체계 하에 추진되고 있음(<표 1> 참조).<sup>5)</sup>
- 유상원조는 개도국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 대외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근거로 추진함.
- 무상원조는 개도국과의 우호 협력 및 상호 교류, 경제·사회 발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근거로 추진함.
- 추진 체계를 보면 양자원조의 경우 유상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EDCF)이 전담하며, 무상은 외교부와 KOICA, 개별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함.
- 다자원조는 국제금융기구는 기획재정부가 전담하고, UN은 외교부, 그리고 기타 국제

4) 일례로 우리 정부가 33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KOICA가 2011년 발주한 캄보디아 씨엠립 주립병원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의 종합관리(PMC)는 우리나라 순천향병원이 맡았으나, 실제 설계와 시공은 중국 건설사에게로 돌아감.

5) 이와 같은 원조별 추진 체계의 다원화는 원조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2008년 OECD DAC는 특별 검토를 통해 단일 원조기관을 구성하고,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기구는 소관 부처별로 추진함.

<표 1> ODA 양·다자 및 유·무상 담당 기관 현황

ODA 형태		주무부처	주관 및 시행 기관	관련 법
양자원조	유상원조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무상원조	외교부	KOICA 포함 40여 개 개별 기관 <sup>주)</sup>	「한국국제협력단법」
다자원조	국제금융기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기타 국제기구	외교부 및 개별 기관		-

주 : 현재 무상원조를 시행하는 30여 개의 개별 기관은 각 지자체를 포함해 관련 부처 및 연구원 등이 포함됨.

- 공적개발원조의 조달 방식은 계약의 주체에 따라 직접 조달과 간접 조달로 구분되며, 조달 장소에 따라 현지 조달과 본부 조달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 조달은 원조기관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간접 조달은 수원국 정부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원조기관은 재원만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함.
- 한편, 현지 조달이란 수원국의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며, 국내(본부) 조달이란 원조기관(국)의 조달 시스템에 의한 조달을 의미함.
- 현재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조달 방식을 보면 무상원조는 원조기관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직접 조달 방식을, 유상원조는 수원국 정부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간접 조달 방식을 취하고 있음. 구체적인 입찰 방식으로는 양자 모두 국제 경쟁 입찰, 현지 입찰, 국내(본부) 입찰의 세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 ODA 현황 : ② 원조 실적

- 우리나라는 ODA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원조 규모를 증대시켜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GNI의 0.14%임. 이 중 순지출 기준으로 무상원조가 약 60%, 양자원조가 약 7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함(<표 2> 참조).
- 특히 2005년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전후 복구 지원 증가, 미주개발은행 가입에 따른 신규 출자 등으로 원조 규모가 급증하였으며, 2010년에는 OECD DAC 가입으로 총 ODA 금액이 약 12억 달러를 기록함.

-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ODA 규모는 약 15.5억 달러(잠정)로 이 가운데 무상원조가 59.5%(6억 9,600만 달러), 유상원조가 40.1%(4억 6,600만 달러)이며, 양자원조가 74.9%(11억 6,200만 달러), 다자간 원조가 25.1%(3억 8,900만 달러)를 차지함.
- 향후 우리나라의 목표는 2015년까지 GNI의 0.25%로 ODA를 증대하는 것임.<sup>6)</sup>

<표 2>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 현황(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잠정)
총 ODA	696.1	802.3	816.0	1,173.8	1,324.6	1,550.9
양자간 원조	490.5 (70.5)	539.2 (67.2)	581.1 (66.1)	900.6 (76.7)	989.6 (74.7)	1,162.2 (74.9)
무상원조	358.3 (73.1)	368.7 (68.4)	367.0 (68.1)	573.9 (63.7)	575.0 (58.1)	696.0 (59.9)
유상원조	132.2 (26.9)	170.6 (31.6)	214.1 (39.7)	326.7 (36.3)	414.6 (41.9)	466.1 (40.1)
다자간 원조	205.6 (29.5)	263.1 (32.8)	234.9 (28.8)	273.2 (23.3)	335.0 (25.3)	388.8 (25.1)
ODA/GNI(%)	0.07	0.09	0.1	0.12	0.12	0.14

주 : 1) 순지출액(Disbursement)이란 약속된 자금이 수원국이나 수원기관으로 공여된 금액임.

2) ( ) 안은 비중임. 이하 동일.

자료 : OECD Stats, EDCF 통계 DB; ODA Korea, www.odakorea.go.kr, 2013. 7월 이하 동일.

- 최근 5년 간(2007~2011년) 부문별 지원 현황을 보면,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교육·보건·식수·공공정책 등)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운송·통신·에너지·금융 등)가 각각 평균 45.5%와 26.8%로 집중 지원되고 있음(<표 3> 참조).
- 그 외에 생산(산업) 부문 9.5%, 다 부문 6.2%, 행정비용 5.2%, 인도적 지원 2.9%, 환경 보호 1.5%, 기타(물자 지원 및 일반 프로그램, 부채 관련 지원, 기타) 2.4%로 구성됨.

<표 3> 최근 5년 간 부문별 ODA 양자간 원조 추이(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지원 부문	2007	2008	2009	2010	2011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265.6(54.1)	238.5(44.2)	278.5(47.9)	395.9(44.0)	416.3(42.1)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104.2(21.2)	124.1(23.0)	152.7(26.3)	250.2(27.8)	308.2(31.1)
생산(산업)부문	47.6(9.7)	80.4(14.9)	61.2(10.5)	64.6(7.2)	77.2(7.8)
환경보호 및 기타	73.1(14.9)	96.2(17.8)	88.8(15.3)	190.0(21.1)	187.9(19.0)
총계	490.5(100.0)	539.2(100.0)	581.2(100.0)	900.7(100.0)	989.6(100.0)

자료 : 전게서.

6) DAC 회원국의 2011년도 평균 ODA/GNI 비율은 0.31%이며, UN의 2015년 목표치는 0.7%임.

- 최근 5년 간 지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표 4>에서와 같이 아시아 지역이 평균 54.5%로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 지역임.
-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16.8%, 기타 9.9%, 중남미 8.8%, 중동 5.6%의 순을 나타냄.
- 단, 추세를 보면 아시아 지역의 지원이 규모 면에서 최근 5년 간 가장 크나 지원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나 비중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최근 5년 간 지역별 ODA 양자간 원조 지원 추이(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아시아	229.3(46.7)	250.8(46.5)	292.1(50.3)	553.0(61.4)	583.9(59.0)
아프리카	70.2(14.3)	104.1(19.3)	95.0(16.3)	139.9(15.5)	178.3(18.0)
중동	70.7(14.4)	30.5(5.7)	21.4(3.7)	34.3(3.8)	41.3(4.2)
유럽	16.9(3.4)	12.9(2.4)	46.4(8.0)	38.7(4.3)	20.7(2.1)
아메리카(중남미)	54.7(11.1)	68.7(12.7)	55.8(9.6)	64.5(7.2)	64.4(6.5)
오세아니아	3.7(0.8)	2.2(0.4)	1.5(0.3)	5.6(0.6)	4.2(0.4)
기타	45.1(9.2)	70.0(13.0)	68.9(11.9)	64.7(7.2)	96.8(9.8)
합계	490.5(100.0)	539.2(100.0)	581.2(100.0)	900.7(100.0)	989.6(100.0)

자료 : 전게서.

- 다음으로 최근 5년 간 소득 그룹별 지원 현황을 보면, 하위 중소득국이 평균 37.6%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음(<표 5> 참조).
- 2002년 이후에는 최빈국이 주요 수원국으로 자리 잡아 5년 평균 3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하위 중소득국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큰 변화가 없음.

<표 5> 최근 5년간 소득그룹별 ODA 양자간 원조 지원 추이(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소득 그룹	2007	2008	2009	2010	2011
최빈국	121.0(24.7)	144.2(26.8)	161.2(27.7)	333.4(37.0)	346.8(35.0)
기타 저소득국	37.2(7.6)	68.5(12.7)	76.5(13.2)	168.3(18.7)	12.1(1.2)
하위 중소득국	250.9(51.1)	207.8(38.5)	204.2(35.1)	280.3(31.1)	372.7(37.7)
상위 중소득국	21.8(4.4)	28.2(5.2)	38.8(6.7)	22.4(2.5)	113.5(11.5)
고소득국	0.2(0.0)	-	-	-	-
소득 미배분	59.5(12.1)	90.5(16.8)	100.5(17.3)	96.2(10.7)	144.5(14.6)
합계	490.5(100.0)	539.2(100.0)	581.2(100.0)	900.7(100.0)	989.6(100.0)

자료 : 전게서.



## □ 우리나라 ODA의 언타이드 추진 계획<sup>7)</sup>

- 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에 대비하여 우리 원조 정책 및 제도의 질적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언타이드 원조 확대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함(<표 6> 참조).
- 우리나라는 ① 개발 과정에 있어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와 역량 개발 촉진으로 원조 조화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②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한 거래 비용 절감으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위해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추진코자 함.
- 이에 따라 2005년 11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대외원조 개선 종합 대책”에서 우리나라는 OECD 등 기준에 부합토록 유·무상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명시함.
- 이후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07년 하반기 “언타이드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약속함. 즉, 2010년 DAC 가입시까지 국제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을 노력하되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강구하기로 함.
- ODA의 언타이드화는 대상 국가 및 대상 사업의 확대를 통해 2015년까지 전체 ODA의 75% 수준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 유상원조의 경우 1단계인 2008년까지 최빈국이자 MDB 협조 용자 사업을 통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2단계로 DAC에 가입하는 2010년까지 최빈국 및 MDB 협조 용자 전체로 확대하여 25%까지 확대하며, 3단계로 2015년까지는 비교우위 및 구속성 실익이 없는 사업으로 50%까지<sup>8)</sup> 확대하고자 함.
- 무상원조도 파리선언<sup>9)</sup> 중간 점검(2008년), DAC 가입(2010년), MDGs(새천년 개발 목표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sup>10)</sup> 달성 목표 연도(2015년)를 고려하여 언타이드화 목표율을 2008년 20~30%, 2010년 50%, 2015년 100%로 설정함.

7) 이하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 “원조의 언타이드화 추진 로드맵(안)”(2008. 1)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임.

8) 2005년 기준 DAC 회원국 총원조액 중 언타이드로 보고된 비율은 약 86.5%임.

9) 파리선언은 OECD DAC 주관으로 200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에서 채택된 결과 문서로 정식 명칭은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임. 이는 원조의 효과 제고를 위한 5개 원칙을 핵심 내용으로 함.

10) 2001년 6월 UN은 2000년 9월 채택된 밀레니엄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목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새천년 개발 목표(MDGs)를 발표함. 이는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 평등 및 여성 권익 향상, 아동 사망률 감소, 모자 보건 향상, HIV/AIDS와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됨.

<표 6> 우리나라 ODA의 언타이드화 추진 로드맵

구분	2007~2008	2010(DAC 가입)	2015(MDBs 목표연도)
전체	-	전체 유상원조의 37.18% <sup>주)</sup>	-
유상원조	시범사업 실시(최빈국이자 MDB 협조 용자 사업)	최빈국 및 MDB 협조 용자 전체로 확대(25%)	비교우위 및 구축성 실익이 없는 사업 중심으로 확대(50%)
무상원조	준비 및 시범 단계(20~30%) (최빈국 대상 시범사업 실시)	도입 단계(50%) (최빈국 언타이드 추진 및 일부 저소득국 선별적 확대)	활성화 단계(100%) (현 DAC 수준의 언타이드 원조 추진)

주 : 기획예산처 2007~2011 국가재정운영계획상 ODA 확대 계획에 근거.

자료 : 관계 부처 합동(2008), “원조의 언타이드화 추진 로드맵(안).”

- 유상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위한 지원 대상 국가 및 사업의 사전 선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함.
  - 최빈국, 경험 잠재력이 큰 국가를 사전에 선정. 즉, 20개의 최빈국과 자원 부국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 경험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우선으로 함.
  - EDCF 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IT 서비스 등 우리 기업의 비교우위로 인해 수주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우선으로 함.
  -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또는 자원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주변 인프라 지원 사업임.
  - 구축성 지원이 부적절하거나 지원 실익이 없는 사업임. 이에는 MDB 협조 용자 사업, 프로그램 차관, 상업성이 있는 사업, 민간 참여사업(PPP), 현지 조달이 많아 수출 효과가 미미한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무상원조에서 언타이드 대상 사업은 DAC 권고에 따라 ① 8개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② 언타이드화 적용 대상 사업 규모에 대한 하한선<sup>11)</sup> 설정 없이 언타이드화를 추진하고자 함.
  - DAC 권고상 언타이드 대상 8개 분야란, ① 국제수지 및 구조조정 지원, ② 부채 탕감, ③ Sector 및 Multi-sector 프로그램 지원, ④ 투자 프로젝트 지원, ⑤ 수입 및 물자 지원, ⑥ 상업 서비스 계약, ⑦ NGO의 조달 관련 활동 지원, ⑧ 투자 관련 기술 협력임.
  - 언타이드 사업의 조달은 국제 경쟁 입찰 및 현지 조달 방식을 병행함. 즉, 대규모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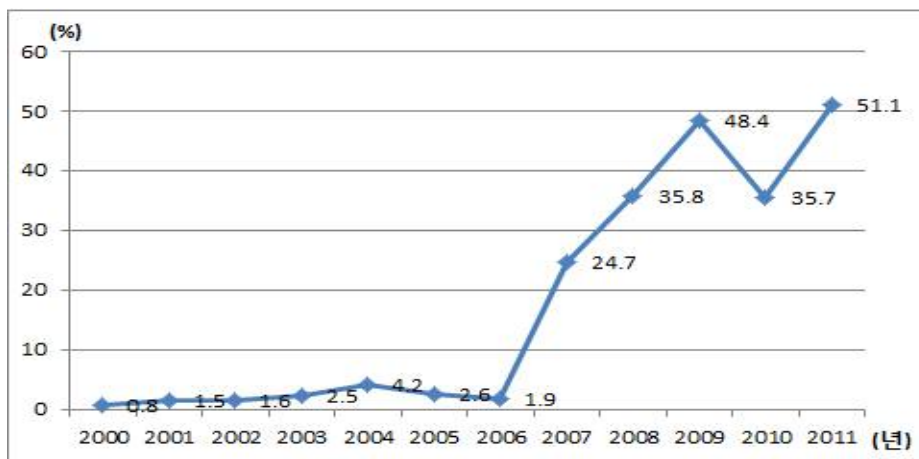
11) DAC는 SDR 700,000 미만 일반 원조 및 SDR 130,000 미만 투자 관련 기술 협력에 대한 언타이드 대상 제외 조항을 2006년에 폐지함.

약의 경우 국제 경쟁 입찰(ICB)에 의해 조달하며, 소규모 계약의 경우에는 ① 수원국 조달 시스템 이용, ② 공여 당사국에 의한 현지 조달, ③ 국내 입찰의 세 가지 방식을 병행함.

### □ 우리나라 ODA 양자간 원조의 언타이드화 동향

- 앞서 살펴본 ODA의 언타이드화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이후 우리나라 ODA의 언타이드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함. 이에 따라 2011년에 전체 양자간 원조 중 언타이드 비율은 이미 51.1%나 되는 것으로 집계됨.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ODA의 양자간 원조 가운데 언타이드(비구속성) 비율은 2000~2006년도까지는 전체 양자간 원조 중 2% 내외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음.
- 그러나 2007년에는 24.7%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OECD DAC 가입을 신청한 2009년에는 48.4%까지 급증하였음. 2010년 언타이드화 비중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상승하여 전체 양자간 ODA 중 과반수 이상이 이미 언타이드 원조로 지원되는 양상을 보임.

<그림 1> 우리나라 ODA 양자간 원조 중 언타이드화 비중 추이(약정 기준)



주 : 2011년 비율은 한국수출입은행 내부 자료이며, 2012년 자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1), 「우리나라 ODA 현황」, 27~28쪽.

- 언타이드화 비중을 다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무상원조의 경우 2007년 이전에도 10%대 내외로 언타이드로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그러던 것이 2007년 이후 언타이드화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 들어서는 전체 무상원조 중 언타이드화 비중이 68.4%에 달하고 있음.
- 반면, 유상원조의 경우 2006년까지는 언타이드 지원이 전혀 없었다가 DAC 가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언타이드로 지원하기 시작함. 2007년 24.2%를 기록했던 언타이드 지원 비중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전체 유상 지원액 중 46.3%까지 확대됨.

<표 7> 우리나라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의 언타이드화 비중 추이(약정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무상원조					유상원조				
	합계	비 구속성	부분 구속성	구속성	비구속성 비율	합계	비 구속성	부분 구속성	구속성	비구속성 비율
2000	19.96	1.89	4.2	13.87	9.5	209.43	-	-	209.43	0
2001	23.17	2.22	6.01	14.94	9.6	121.62	-	-	121.62	0
2002	26.65	3.35	19.12	4.17	12.6	187.81	-	-	187.81	0
2003	95.59	6.66	45.13	43.80	7.0	171.03	-	-	171.03	0
2004	167.61	17.2	61.51	88.90	10.3	242.47	-	-	242.47	0
2005	239.59	14.34	89.09	133.16	6.1	318.76	-	-	318.76	0
2006	165.43	9.99	97.70	57.74	6.0	359.22	-	-	359.22	0
2007	224.36	58.59	94.83	70.94	26.1	584.20	141.15	-	443.05	24.2
2008	229.93	99.67	89.79	40.47	43.3	967.81	329.17	-	638.64	34.0
2009	203.01	150.12	-	52.89	73.9	1,067.11	464.49	-	602.62	43.5
2010	498.32	230.55	-	267.77	46.3	1,091.29	336.99	-	754.29	30.9
2011	287.78	196.94	-	90.84	68.4	1,053.97	488.39	-	565.57	46.3

주 : 2011년도 수치는 한국수출입은행 내부 자료임.

자료 : 전계서.

## □ 소결

- 앞서 제시된 ODA 언타이드화 로드맵 상의 시기보다 1년 정도 늦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 ODA의 언타이드 비중은 거의 로드맵에서 제시된 수준으로 언타이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에 따라 언타이드화 확대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을 부분은 유상원조인 EDCF인 것을 나타냄.

- EDCF의 경우 단위당 지원 규모도 크고 시공 분야에 지원되는 비중이 높으므로 향후 언타이드화가 지속될 경우 해외건설 시공 분야에 미치는 상대적인 파급효과가 클 수 밖에 없음.
- 2011년도 우리나라 ODA의 언타이드화 비중인 51.1%는 2010년 DAC 국가들의 ODA 언타이드 평균 비중(83.6%)과 비교해볼 때 32.5%p나 낮은 상황임.
-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DAC 국가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5년 간 대다수 선진국들의 언타이드 비중은 60~100%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유럽 국가들의 경우 9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60%대를 나타냄.
- 일본의 경우 최근 언타이드화 비중이 미미하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ODA 중 90% 이상을 언타이드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DAC 국가들의 언타이드 수준과 앞서 살펴본 언타이드 추진 로드맵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 ODA의 언타이드 지원 비중도 단기간(2년) 내에 급격히 확대(90% 수준까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표 8> DAC 주요국의 ODA 언타이드화 수준(약정 기준)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비 구속성	부분 구속성	구속성	비 구속성	부분 구속성	구속성	비 구속성	부분 구속성	구속성	비 구속성	부분 구속성	구속성	비 구속성	부분 구속성	구속성
DAC 평균	88.3	0.2	11.5	83.9	0.3	15.8	86.5	0.2	13.3	84.5	0.2	15.4	83.6	1.3	15.2
호주	91.7	-	8.3	98.4	-	1.6	96.7	-	3.3	90.8	-	9.2	-	-	-
일본	95.6	-	4.4	95.1	-	4.9	96.5	-	3.5	94.8	-	5.2	93.7	3.4	2.9
캐나다	63.0	0.2	36.8	74.5	0.1	25.4	90.8	1.3	7.8	98.3	-	1.7	99.3	-	0.7
프랑스	95.6	-0.7	5.1	92.6	-	7.4	81.9	-	18.1	89.5	-	10.5	96.6	-	3.4
독일	93.3	-	6.7	93.4	-	6.6	98.2	-	1.8	97.1	-	2.9	96.0	-	4.0
이탈리아	77.0	2.5	20.5	59.9	7.9	32.2	78.0	1.7	20.3	56.2	0.5	43.2	58.5	1.0	40.5
뉴질랜드	90.2	-	9.8	87.8	0.4	11.8	92.7	-	7.3	90.1	-	9.9	89.4	-	10.6
스페인	82.8	-	17.2	89.1	-	10.9	69.1	1.2	29.7	76.6	3.7	19.7	76.2	16.6	7.3
영국	100.0	-	0.0	100.0	-	0.0	100.0	-	0.0	100.0	-	0.0	100.0	-	0.0
스위스	96.3	-	3.7	97.8	-	2.2	97.3	-	2.7	99.2	-	0.8	74.0	-	26.0
미국	63.5	-	36.5	68.5	-	31.5	74.7	-	25.3	69.8	-	30.2	69.5	-	30.5

자료 : www.odakorea.go.kr, 「ODA 통계 자료집」.

### 3. ODA 언타이드화가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

#### □ ODA가 해외건설에 가지는 의의

-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ODA, 특히 EDCF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상업성 자금과 더불어 발주자의 금융 제공 요구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라는 것임.
- 2000년 이후 재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프로젝트 수주의 전제 조건으로 시공사에게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금융 제공을 요구하거나 주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발주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금융 제공은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함.
- 특히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EDCF는 2006년까지는 100% 타이드로 지원되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EDCF는 2007년 이후 언타이드 비중을 높여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타이드로 지원되는 비중이 높은 편임.
- ODA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해외건설 시 당면하는 리스크에 취약한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 속에서 해외건설 진출 경험 및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수주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임.
- 해외건설 사업 수행시 기업은 사전 견적부터 공사 계약, 준공에 이르기까지 Country Risk를 비롯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됨. 따라서 해외건설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거나 리스크에 취약한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은 자칫 한 건의 해외 공사 실패로도 기업의 사활이 좌우되는 경우가 발생함.
-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해외건설 경험 및 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으며, 이에 가장 부합되는 공사가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ODA 공여 사업임.
- 지금까지 KOICA 무상 지원 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국내 발주 방식으로 발주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EDCF 유상 지원 사업은 비록 수원국에서 발주하여 수원국 입·낙찰 절차에 따라 발주되지만, 타이드 사업으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나 기업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해 왔음.

- 이러한 이유로 ODA 재원 사업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고, 국내 기업 간 경쟁이므로 기술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등이 다소 취약한 중견 및 중소기업들도 적은 비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해외건설 중 ODA 재원 사업 수주 동향

- 최근 5년 간 ODA를 재원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을 보면, 2011년 71건, 약 6억 7,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연평균 약 50건 내외, 2억~5억 달러 내외의 공사가 수주됨을 알 수 있음(<표 9> 참조).
- 공종별로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용역의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 ODA 재원 공사 중 약 70% 내외를 차지하였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토목 공사의 비중이 가장 높아 역시 약 7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ODA 재원 해외건설 수주 실적 동향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4 (100.0)	563,778 (100.0)	27 (100.0)	387,282 (100.0)	55 (100.0)	210,823 (100.0)	71 (100.0)	674,627 (100.0)	49 (100.0)	305,317 (100.0)	
공종별	토목	7 (15.9)	397,864 (70.6)	6 (22.2)	219,441 (56.7)	4 (7.3)	160,358 (76.1)	16 (22.5)	492,971 (73.1)	5 (10.2)	177,158 (58.0)
	건축	4 (9.1)	65,282 (11.6)	7 (25.9)	66,105 (17.1)	1 (1.8)	2,411 (1.1)	5 (7.0)	16,852 (2.5)	3 (6.1)	16,312 (5.3)
	산업설비	3 (6.8)	57,753 (10.2)	1 (3.7)	46,840 (12.1)	1 (1.8)	820 (0.4)	-	51 (0.0)	1 (2.0)	51,385 (16.8)
	전기	-	-	1 (3.7)	46,173 (11.9)	-	-	3 (4.2)	76,603 (11.4)	2 (4.1)	17,651 (5.8)
	통신	-	-	-	-	-	-	1 (1.4)	2,161 (0.3)	-	-
	용역	30 (68.2)	42,879 (7.6)	12 (44.4)	8,723 (2.3)	49 (89.1)	47,234 (22.4)	46 (64.8)	85,989 (12.7)	38 (77.6)	42,811 (14.0)
지역별	중동	5 (11.4)	60,184 (10.7)	-	29,827 (7.7)	-	715 (0.3)	2 (2.8)	1,207 (0.2)	3 (6.1)	53,871 (17.6)
	아시아	32 (72.7)	429,740 (76.2)	24 (88.9)	356,080 (91.9)	36 (65.5)	114,685 (54.4)	47 (66.2)	609,564 (90.4)	28 (57.1)	98,419 (32.2)
	아프리카	3 (6.8)	55,623 (9.9)	3 (11.1)	1,559 (0.4)	13 (23.6)	94,552 (44.8)	6 (8.5)	17,632 (2.6)	12 (24.5)	140,599 (46.1)
	중남미	3 (6.8)	18,124 (3.2)	-	-184 (0.0)	6 (10.9)	871 (0.4)	10 (14.1)	46,224 (6.9)	6 (12.2)	12,428 (4.1)
	북미/ 태평양	-	107 (0.0)	-	-	-	-	-	-	-	-

주 : ( ) 안은 비중임.

자료 : 해외건설협회 내부 자료.

-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설비의 비중이 높아져 2012년의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ODA 재원 공사 중 산업설비가 16.8%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전술한 지역별 ODA 지원 현황에서와 같이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건수나 금액 양 측면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비중이 높아져 2012년의 경우 건수로는 24.5%를 차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46.1%로 아시아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ODA 재원 해외건설 수주 실적을 다시 EDCF와 KOICA 사업으로 구분해보면, 먼저 EDCF 재원 공사의 경우 최근 5년 간 건수로는 연평균 약 24건 내외, 금액으로는 연평균 약 3억 8,000만 달러 내외 공사가 수주되는 것으로 집계됨(<표 10> 참조).
- 공종별로 보면, 건수로는 용역이 가장 많아 전체 EDCF 재원 수주의 약 70% 내외를 차지하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0% 내외에 불과하여 건당 규모는 100만~300만 달러 내외로 그다지 크지 않음.

<표 10> EDCF 재원 해외건설 사업 수주 실적 추이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9 (100.0)	534,010 (100.0)	12 (100.0)	341,259 (100.0)	24 (100.0)	188,327 (100.0)	31 (100.0)	581,390 (100.0)	22 (100.0)	269,297 (100.0)	
10개 분야	토목	7 (24.1)	397,533 (74.4)	4 (33.3)	214,082 (62.7)	4 (16.7)	159,794 (84.8)	12 (38.7)	445,827 (76.7)	5 (22.7)	176,821 (65.7)
	건축	2 (6.9)	54,400 (10.2)	1 (8.3)	28,483 (8.3)	-	-	-	5,436 (0.9)	-	-
	산업설비	1 (3.4)	46,432 (8.7)	1 (8.3)	46,498 (13.6)	-	-	-	51 (0.0)	-	47,429 (17.6)
	전기	-	-	1 (8.3)	46,173 (13.5)	-	-	1 (3.2)	72,858 (12.5)	1 (4.5)	13,995 (5.2)
	통신	-	-	-	-	-	-	1 (3.2)	2,161 (0.4)	-	-
	용역	19 (65.5)	35,645 (6.7)	5 (41.7)	6,023 (1.8)	20 (83.3)	28,533 (15.2)	17 (54.8)	55,057 (9.5)	16 (72.7)	31,052 (11.5)
지역별	중동	2 (6.9)	48,855 (9.1)	-	29,650 (8.7)	-	618 (0.3)	-	-	1 (4.5)	47,904 (17.8)
	아시아	21 (72.4)	411,573 (77.1)	12 (100.0)	311,793 (91.4)	13 (54.2)	94,772 (50.3)	24 (77.4)	533,273 (91.7)	11 (50.0)	78,995 (29.3)
	아프리카	3 (10.3)	55,458 (10.4)	-	-	7 (29.2)	92,231 (49.0)	3 (9.7)	7,842 (1.3)	9 (40.9)	138,982 (51.6)
	중남미	3 (10.3)	18,124 (3.4)	-	-184 (-0.1)	4 (16.7)	706 (0.4)	4 (12.9)	40,275 (6.9)	1 (4.5)	3,416 (1.3)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 해외건설협회 내부 자료.



- 금액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공종은 토목으로 건수로는 연평균 약 6건에 불과하지만, 전체 EDCF 자원 해외건설 수주 금액 중 약 70% 내외를 차지하며, 건당 규모가 약 3,000만~5,600만 달러 공사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최근 5년 간 KOICA 자원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 실적을 보면, <표 11>과 같이 2008년과 2009년은 연 15건이던 것이 2010년 이후 건수가 두 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3년 동안은 연평균 약 33건 정도로 집계됨. 금액 기준으로는 9,300만 달러를 기록한 2011년을 제외하면 KOICA 자원의 해외건설 수주는 연평균 약 3,360만 달러임.
- 공종별로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EDCF와 마찬가지로 용역이 평균적으로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건축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연도에 따라 토목과 산업설비가 각기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1> KOICA 자원 해외건설 사업 수주 실적 추이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 (100.0)	29,768 (100.0)	15 (100.0)	46,023 (100.0)	31 (100.0)	22,496 (100.0)	40 (100.0)	93,237 (100.0)	27 (100.0)	36,020 (100.0)	
공종별	토 목	-	331 (1.1)	2 (13.3)	5,359 (11.6)	-	564 (2.5)	4 (10.0)	47,144 (50.6)	-	337 (0.9)
	건 축	2 (13.3)	10,882 (36.6)	6 (40.0)	37,622 (81.7)	1 (3.2)	2,411 (10.7)	5 (12.5)	11,416 (12.2)	3 (11.1)	16,312 (45.3)
	산업설비	2 (13.3)	11,321 (38.0)	0	342 (0.7)	1 (3.2)	820 (3.6)	-	-	1 (3.7)	3,956 (11.0)
	전 기	-	-	-	-	-	-	2 (5.0)	3,745 (4.0)	1 (11.1)	3,656 (10.1)
	통 신	-	-	-	-	-	-	-	-	-	-
	용 역	11 (73.3)	7,234 (24.3)	7 (46.7)	2,700 (5.9)	29 (93.5)	18,701 (83.1)	29 (72.5)	30,932 (33.2)	22 (81.5)	11,759 (32.6)
지역별	중동	3 (20.0)	11,329 (38.1)	-	177 (0.4)	-	97 (0.4)	2 (5.0)	1,207 (1.3)	2 (7.4)	5,967 (16.6)
	아시아	11 (73.3)	18,167 (61.0)	12 (80.0)	44,287 (96.2)	23 (74.2)	19,913 (88.5)	23 (57.5)	76,291 (81.8)	17 (63.0)	19,424 (53.9)
	아프리카	1 (6.7)	165 (0.6)	3 (20.0)	1,559 (3.4)	6 (19.4)	2,321 (10.3)	3 (7.5)	9,790 (10.5)	3 (11.1)	1,617 (4.5)
	중남미	-	-	-	-	2 (6.5)	165 (0.7)	6 (15.0)	5,949 (6.4)	5 (18.5)	9,012 (25.0)
	북미/ 태평양	-	107 (0.4)	-	-	-	-	-	-	-	-

주 : ( ) 안은 비중임.

자료 : 해외건설협회 내부 자료.

- 공종별 수주 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용역이 약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축의 비중이 높고, 토목과 산업설비가 연도에 따라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아시아의 비중이 높으나, 최근에는 중남미와 중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결 : ODA 언타이드화에 따른 영향

- 이상과 같이 ODA를 재원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가 전체 해외건설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건수와 금액 양 측면에서 아직은 미미한 수준임(<표 12> 참조).
- 최근 5년 간 전체 해외건설 수주 중 ODA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약 8% 정도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0.8% 수준에 불과함.
-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비중이 더 낮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DA 재원 사업 중 과반수 이상의 건수가 용역으로 단위당 규모가 작은 사업이기 때문임.

<표 12> 전체 해외건설 수주 실적 중 ODA 재원 사업 수주 비중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ODA 재원 사업 수주 실적(A)	44	5.6	27	3.9	55	2.1	71	6.7	49	3.1
중소 건설업체 해외 원청공사 합계(B) <sup>주1)</sup>	n.a.	57.1	n.a.	46.1	n.a.	38.1	n.a.	38.5	n.a.	22.5
해외건설 수주 실적 총계(C)	642	476.4	559	491.5	588	716.0	625	591.3	620	648.8
A/B(%) <sup>주2)</sup>	n.a.	<b>9.8</b>	n.a.	<b>8.5</b>	n.a.	<b>5.5</b>	n.a.	<b>17.4</b>	n.a.	<b>13.8</b>
A/C(%)	<b>6.9</b>	<b>1.2</b>	<b>4.8</b>	<b>0.8</b>	<b>9.4</b>	<b>0.3</b>	<b>11.4</b>	<b>1.1</b>	<b>7.9</b>	<b>0.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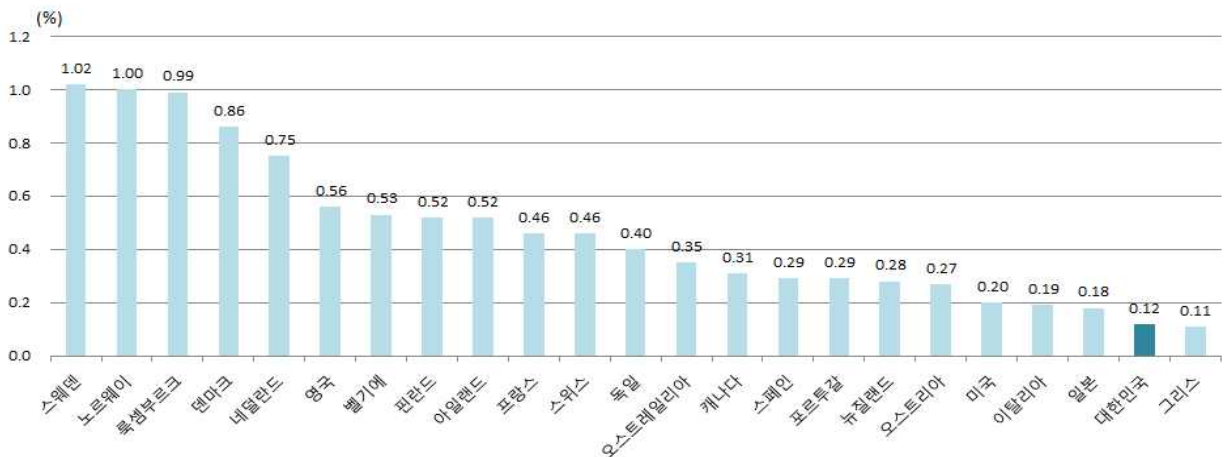
주 : 1) 중소 건설업체 해외 원청공사 금액은 원청 단독과 원청 합작을 합한 수치임.

2) EDCF나 KOICA 지원 사업은 원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 해외 수주 실적 중 원청공사만을 대상으로 비중을 산정함.

- 상기와 같이 ODA 재원 공사의 수주 실적이 해외건설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 ODA 규모가 작기 때문임.
-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DAC 23개 회원국 중 22위로 우리나라 GNI(Gross National Income) 대비 0.12% 수준에 불과함.

- 우리나라와 해외건설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가 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3개국 중 21위이고, GNI 대비 0.18%이지만,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음.

<그림 2> OECD DAC 23개국의 GNI 대비 ODA 비중(2011년)



자료 : OECD DAC.

-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 같이 향후 ODA 규모가 확대된다면 ODA가 해외건설, 특히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증대될 것임.
-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에는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sup>12)</sup>
- 종합적으로 보면, ①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으로 향후 우리나라 ODA 규모의 대폭적인 증가 전망, ② ODA 사업 중 건수 비중이 높은 용역의 경우 사업 초기에 시행되는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후속 사업(시공 및 CM 등)과의 높은 연계성, ③ 해외사업 경험이 일천한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ODA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해외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 확보 가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DA, 특히 EDCF의 언타이드화는 현재 ODA 재원 공사가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상으로 해외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2) 이와 관련된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08), “원조의 언타이드화 추진 로드맵”을 참조할 것.

- 참고로 현재 ODA의 90% 이상이 언타이드로 발주되는 일본의 경우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ODA 중 일본 기업이 수주하는 비중은 3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 용역인 컨설턴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의 비중이 높아 31.5%에 달하고 선진국의 비중도 높음.
- 반면, 공사의 경우에는 일본 기업의 비중이 25.7%로 낮으며, 주로 수원국 기업이 수주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음.<sup>13)</sup>

<표 13> 2008년 일본의 엔차관 계약 기업의 국적별 순위

구분	본 공사					컨설턴트				
	기업 국적	건수	기업 수	계약액(억엔)	비율(%)	기업 국적	건수	기업 수	계약액(억엔)	비율(%)
1	일본	13	12	1,809.3	25.7	일본	35	15	485.1	31.5
2	투르크메니스탄	1	3	1,124.6	16.0	인도	9	10	305.8	19.9
3	인도	8	19	824.4	11.7	홍콩	3	2	149.6	9.7
4	슬로바키아	1	2	751.8	10.7	프랑스	3	2	142.5	9.3
5	중국	9	14	628.9	8.9	미국	4	3	70.0	4.5
6	브라질	1	1	339.3	4.8	필리핀	2	4	59.0	3.8
7	프랑스	1	1	339.3	4.8	인도네시아	6	16	50.6	3.3
8	베트남	3	4	255.4	3.6	스리랑카	2	4	43.5	2.8
9	인도네시아	4	4	175.4	2.5	케냐	1	2	40.6	2.6
10	스페인	1	1	105.1	1.5	베트남	3	3	36.4	2.4
11	모로코	1	1	105.1	1.5	영국	2	2	20.9	1.4
12	연관 사업을 포함한 총 합계액			7,042.5		캐나다	2	2	19.8	1.3
						방글라데시	2	2	19.8	1.3
14						요르단	1	1	19.1	1.2
15						독일	3	3	16.8	1.1
16						스위스	1	1	14.5	1.0
17						호주	1	1	14.3	0.9
						뉴질랜드	1	1	14.3	0.9
19						덴마크	1	1	9.6	0.6
20						그리스	1	1	1.4	0.1
						기타	1	1	6.2	0.4
						연관 사업을 포함한 총 합계액			1,539.7	

자료 : JICA 및 重化學工業新報(日).

-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ODA의 75%가 언타이드화되는 2015년에는 전체 ODA 금액 중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주하는 공사/용역의 비중은 급격히 하락할 가능

13) JICA 및 重化學工業新報(日) 등에 따르면, 본 공사의 2008년도 일본의 엔차관 공여 국가를 금액이 많은 순서로 보면,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페루, 스리랑카, 모로코, 파키스탄, 과테말라의 순으로 나타남.

성이 높음.

- 특히, 수원국 현지에서 수원국의 발주 시스템에 따라 입찰이 진행되는 EDCF의 경우 현지 건설업체나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후발 개도국 업체들의 건설 공사 입찰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KOICA 등 용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국내 조달을 통해 입찰이 이루어진 반면, 향후에는 현지 입찰이나 국제 경쟁 입찰이 증가하여 국내 업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 나아가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진국 업체들의 용역 분야의 진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

#### 4.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언타이드 원조 도입 및 운용 사례

- 향후 우리나라 ODA의 언타이드화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에 앞서 이미 언타이드 원조를 도입한 일본 및 기타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 주요 선진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재 정부가 제시한 언타이드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진단해 보고, 향후 ODA의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 일본의 최근 ODA 운영 전략

- 일본은 자국 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과 ODA 정책을 연계함으로써 일본 (건설) 업체들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최근 일본 ODA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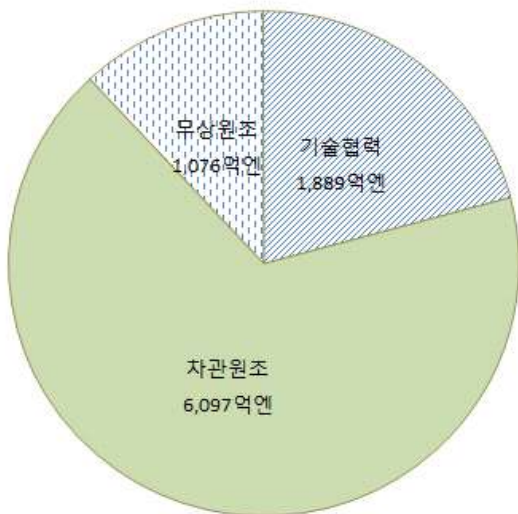
##### ① 기술 협력(technical cooperation) 지원 확대를 통한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개입

- 건설과 관련하여 일본은 차관 공여국 컨설턴트가 입찰 절차 및 업체 선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거나, 자국 업체만이 PQ에 통과할 수 있도록 특수 공종에 대한 실적

을 제한하는 등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sup>14)</sup>

-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도구(tool) 중 하나가 일본 ODA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 협력임.
- 일본은 ‘일본의 기술적 역량과 지식을 활용한 개도국의 개발 지원을 통해 파트너와의 Win-Win 관계를 구축한다’를 ODA의 기본 목표로 표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컨설턴트로서의 전문가 파견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개입함으로써 프로젝트 입찰 시 자국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나감.
- 2012년 JIC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일본 ODA 중 기술 협력으로 지원된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889억 엔으로 전체 ODA 중 20.8%를 차지함(<그림 3> 및 <그림 4> 참조).
- 또한, 2011년을 기준으로 기술 협력 지원 7개 유형(기타 포함) 중 전문가 파견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3> 일본의 ODA 유형별 규모(2011년)



<그림 4> 일본 ODA의 기술 협력 지원 금액 추이



자료 : JICA, “Annual Report 2012”, 21쪽.

## ② ODA의 민간부문 투자 확대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투자

- 특히 최근 ODA 정책을 일본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연계시키기 위한 움직임

14) 국토해양부(2009), 「ODA를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전략 연구」, 44쪽 참조.

임 중의 하나로 지난 2011년 1월 25일 일본 내각은 “2011 새로운 성장 전략 실현 (Realizing the New Growth Strategy 2011)”을 승인함으로써 JICA가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 이는 수원국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이 대규모화됨에 따라 ODA 단독 지원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원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ODA를 민간 부문과 연계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ODA 지원 분야로는 크게 ① PPP 인프라 프로젝트, ② BOP 사업(Base of the Pyramid business)<sup>15)</sup>, 그리고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이 분야들은 첫째, 대규모 프로젝트여서 일본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거나, 둘째,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최근 주목받는 사업이며<sup>16)</sup>, 셋째, ODA를 통해 사회적 과제와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일본 기업 및 정부가 현지 수원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임.
  - 이에 따라 JICA는 PPP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preparatory survey)를 실시하여 2011년 중 16개의 제안서를 선정하여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함.

### ③ 남-남 및 삼자간 협력의 확대(Growing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개도국의 경우 개도국 자신들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원조(남-남 협력)를 제공하고 있음.

15) BOP란, 'Base of the (Economic) Pyramid'의 약자로 미시건 대학의 프라할라드(C.K. Prahalad) 교수와 코넬 대학의 하트(Stuart L. Hart) 교수가 만든 개념으로 2002년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Strategy Business, 26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임. 이는 외환위기 이후 늘어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됨. 이들은 수도, 전기, 전화, 위생 및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 서비스가 결여되어 향후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하며, 향후 중산층으로 진화할 시장임. 이 시장의 특성은 수익성과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비즈니스로서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에 유리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

16) 일본 정부와 기업은 對신흥국 전략을 대폭 수정해 신흥국 중산층 및 빈곤층(BOP) 시장을 경제 성장의 돌파구로 삼는 움직임을 가시화했음. 일본 정부는 2009년 「통상백서」를 통해 기존 선진국 중심의 수출 전략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흥국 진출에 대한 자국 기업들의 분발을 촉구함. 일본 기업들도 생산체제를 포함한 글로벌 전략을 신흥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신흥국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對신흥국 전략을 재정비함.

- 이러한 개발 원조는 매우 독립적이며, 선진국의 원조 방식과는 차이가 있음. 개도국 들은 각자 서로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적인 개발을 하고자 함.
- JICA는 이러한 남-남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신흥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함. 즉, 또 다른 개도국과 연대하여 제3의 개도국 인프라 프로젝트에 진출하는 소위 “삼각 협력 관계(triangular cooperation)”를 모색함.
-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Japan-India African Triangular Cooperation”임. 일본 JICA는 2011년 인도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분야에 원조를 제공함.
- 당시 인도는 동아프리카와 역사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으며, 일본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대륙에 ODA를 두 배 이상 지원하기로 천명한 상황이었음.

④ 후속 협력(follow-up cooperation)을 통해 시설과 장비의 지속적 제공

- 예정된 기간 안에 JICA의 협력으로 구축물이 완성된 후 JICA는 파트너 국가들이 스스로 프로젝트의 결과를 유지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후속 지원(post-project support)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수행함.
- 후속 협력 사업은 첫째, 시설과 장비 문제의 해결로 지속적으로 관련 장비와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며, 둘째, 주변의 여타 국가로 프로젝트 혜택을 확대한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짐.

□ 기타 주요 선진국의 언타이드 원조 도입 · 운용 사례

- 일본 외에 주요 선진국들의 언타이드 원조 추진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sup>17)</sup>
- 언타이드 차관 도입에 따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 점진적으로 도입함.
- 구속성 원조와 차별화된 양허성 수준(concessional level)<sup>18)</sup>을 적용하여 상환 금액

17) 주요 선진국 사례는 관계부처 합동(2008), “원조의 언타이드화 추진 로드맵”을 참조함.

18) 양허성 수준(CL : Concessional Level)이란, 미래의 차관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률(DDR : Differentiated Discount Rate)로 할



- 의 비중을 높임. 일례로 타이드 원조의 경우 양허성 수준이 60~70%라면 언타이드 원조는 15~45% 수준으로 차별화
- 전략적 산업과 전략적 수원국에 중점적으로 지원함. 전략적 분야로는 교통, 에너지 등에 주로 지원하였으며, 국가로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함.
  - 기술 협력(technical assistance)을 활용하여 자국 기술 도입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타이드 효과를 추구함.
  - 채무구제(debt relief)를 통해 가시적인 실적을 확보하고 있음. 앞서 살펴본 OECD 국가들의 경우 채무구제 금액을 제외할 경우 언타이드 원조 실적은 실제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 다음으로 개별 국가들의 언타이드 차관 운용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록 언타이드이기는 하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1996년부터 언타이드 논의가 이루어져 실제로는 2002년부터 도입이 본격화됨. 그러나 언타이드는 원조의 성격상 타이드가 적용될 수 없는 재정 지원(budgetary aid), 현지 비용 지원 등으로 제한함.
  - 스페인은 다양한 원조체계 안에서 실리와 효율성을 추구하며, 최빈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언타이드 차관을 제공함.
  - 독일은 언타이드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술 협력 등을 타이드로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타이드 관행을 유지함. 또한, 언타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혼합 신용, 양허성 수출신용제도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을 지원함.
  - 미국은 2001년 DAC 권고 이후에도 기술 협력, 식량 원조 등을 중심으로 타이드성 원조 기조를 꾸준히 지속함. 일례로 미국은 ODA 중 기술 협력의 비중이 50%로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04년 '새천년개발기금(Millennium Challenge Account)'을 조성, 언타이드로 운영하는 등 변화 조짐을 보임.

인하여 현재 가치로 계산한 후, 이를 차관 금액(명목가치)에서 공제한 금액을 차관 금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를 의미함. 양허성 수준은 원조 자금의 정의 및 원조 조건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양허성 수준이 높을수록 개도국으로부터 향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음을 의미함.

## □ 시사점

- 일본 및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ODA를 언타이드로 제공하는 OECD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사회적 이슈 해결과 자국(기업)의 이익 추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① 지원이 필요하나 타이드가 적용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지원, ② 현지 지출 비용 및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과 같은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③ 기술 경쟁력을 활용하여 자국 기업에 유리한 수주 환경 조성, ④ PPP사업과 같은 민간부문과 연계된 사업에의 투자를 통해 자국 민간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과 같은 고급 전략까지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타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 5. 정부의 대응책 검토 및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정부는 언타이드 원조의 확대 추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 축소 등 부작용에 대비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함.
- 물론, 이러한 보완책들이 건설 관련 프로젝트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건설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정부 대응책을 검토해보고, 향후 ODA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건설 기업의 수주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살펴보고자 함.

## □ 정부의 대응 정책 개관

- ODA 언타이드 확대에 대응하여 정부는 제도적 보완 장치<sup>19)</sup>로 첫째, 기술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의 지원을 확대함.
  - ① 국내 컨설턴트 육성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 선진 공여국의 경우 원조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수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sup>20)</sup> 그러나 우리 기업의 경우

19)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2008), “원조의 언타이드화 추진 로드맵(안)” 참조하기 바람.

20) 2005년 DAC 사무국에 보고된 언타이드 계약 중 60%가 공여국, 18%가 타 공여국, 22%가 개도국에 의해 조달되는 것으로 나타남. 관계 부처 합동(2008년), 전게서.

수주 경쟁력이 아직 미약한 상황이므로 컨설턴트 육성을 통해 이를 강화함.

- ② 기술 협력 사업을 확대함. 즉, 언타이드 대상이 아닌 기술 협력 프로젝트,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타당성 조사 사업의 확대를 통해 국내 유관 기업·기관들의 ODA 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
  - ③ Hardware(건축 및 물자)보다 제도 구축 등 Software 위주의 사업을 점차 확대함.
- 둘째,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함. 즉, 언타이드 원조가 확대됨에 따라 현지 기업, 외국 개발 컨설턴트 등의 수주 비율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① 현지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기술, 자본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부패 방지 및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함.
  - ② 제반 협력사업의 사후 관리 체계를 보강함.

## □ 정부 대응 정책의 평가

- 현재 정부가 제시한 상기 대응책들의 경우 다소 소극적인 방어책들이며, 현재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기술 유출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ODA 언타이드 확대에 따르는 수주 감소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요구됨.
- 언타이드 대상이 아닌 기술 협력 프로젝트,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타당성 조사 사업의 확대 등의 경우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 전 개입을 통한 프로젝트의 사전 정보 입수, 보다 우호적인 입찰 환경의 조성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임.
- 그러나 특히 향후 증가시키고자 하는 기술 협력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대부분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적인 수준(nut cracker)의 기술이 많으므로 단순히 기술 협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기술이 수원국 기업에 의해 복제·유출됨으로써 현지 경쟁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음.<sup>21)</sup>
- 또한, 언타이드 사업의 조달 원칙이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제 경쟁 입찰을 활용하고, 소규모 조달의 경우 현지 조달 방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술 협력만으로 직접적으로 수주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1)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현재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기술 협력 이후 기술 유출에 따르는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① 민간과 연계한 PPP사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 확대

- 전술한 일본의 최근 ODA 정책에서 본 바와 같이 ODA, 특히 유상원조인 EDCF 자금을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통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PPP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아시아의 우리나라 주요 협력 대상국들의 경우 재정 부족으로 PPP 방식으로 인프라 사업 추진을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최근 해외 시장 다변화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도 자원 부족으로 플랜트 사업에 있어서도 시공 업체들이 일부 지분을 투자하여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구하고 있음.<sup>22)</sup>

<표 14> 아시아 주요 협력국의 PPP사업 확대 계획

국가	주요 내용
필리핀	- 2010년 9월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 전담 기구(PPP Center) 설치 - 2013년 2월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심 49개 추진 사업 제시
베트남	- 2010년 11월 PPP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Decision 71) 제정 - 2015년까지 교통 인프라에 400억 달러 투자 계획 수립
인도네시아	- 보증기금 및 대출 기관 설립, 토지 수용 기준 등 민간투자제도 정비 - 우선 추진 26개 포함 총 58개 사업을 등재한 “PPP Book 2012” 발간

자료 : 수출입은행 내부 자료.

- 이를 위해 ①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인프라 및 플랜트 사업을 추진할 때 ODA 자금을 수원국 정부의 출자금 등으로 대출하거나, ② PPP사업의 일부 수행을 위해 수원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③ PPP사업을 위한 SPC에 지분의 일정 부분을 직접 투자하는<sup>23)</sup>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모색이 요망됨.
- 수출입은행 확인 결과 2013년 8월 현재 우리나라 EDCF가 PPP사업과 연계되어 시행

22) 일본의 마르베니는 북동부 Maranhao주에 건설될 정유공장의 총투자비 200억 달러 중 약 30%를 부담하였으며, 일본 미쓰비시는 북동부 Ceara주에 건설될 정유공장의 총투자비 110억 달러 중 약 30%를 부담하면서 브라질 시장에 진출함. 전진구(2011), “Informacion de America del Sur para Construccion y Ambiente y Energia..” 건설산업연구원 내부 세미나 자료.

23) 수출입은행에 문의한 결과 현재 규정상으로는 지분 투자도 가능하다고 함.

- 이 검토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인도네시아 카리안담 건설 및 상수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이는 다목적 댐 건설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여 국내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이와 연계된 송수, 정수 및 배수 시설을 우리나라 기업이 시공 및 운영을 담당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EDCF가 PPP사업에 투자된 사례는 아님.
- ODA의 PPP사업 투자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무상원조 + 민간기업 투자 + PPP사업에 대한 EDCF 투자’를 연계한 PPP 사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즉, 무상원조를 통해 교통, 발전, 도시개발 등 수원국 인프라에 대한 마스터플랜 작성을 지원한 후 PPP로 발주되는 우량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후 사업에 대한 경험이 쌓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개도국에 제안한 PPP사업이나 개도국에서 발주한 PPP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첫째, EDCF 관할 기관의 PPP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역량을 갖추고 선별 기준을 마련하며, 나아가 다국적 개발은행들(MDBs)이 PPP사업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 지에 대한 벤치마킹이 요구됨.
  - 둘째, 현재 EDCF 지원 절차와 차별화된 별도의 지원 절차 구축이 필요함. 현재 EDCF 지원은 기본적으로 수원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PPP 사업 투자를 위해서는 민간 제안이나 우리 정부의 제안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 개발이 요망됨.
  - 셋째,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 간의 정책 협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② 기술 협력과 유상지원의 연계 강화(package화)

- 앞서 ODA 언타이드화에 따른 영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ODA 언타이드화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부분은 양자 지원 중 무상지원보다는 유상지원인 EDCF임.

따라서 수원국에서 현지 발주제도에 따라 발주되는 EDCF 재원 사업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전략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주로 무상지원인 기술 협력을 통해 수주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한 사업의 경우 유상 지원인 EDCF를 상대적으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체들의 수주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EDCF 차관의 경우 연 0.01~2.5%의 이자율로 최장 15년 이내 거치로 최장 40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술 협력을 한 프로젝트의 경우 이자율이나 거치/상환 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함으로써 곧바로 공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③ 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의 확산(수출)

-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요 수원국들에 우리나라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code, standard 등이 적용되도록 우리나라의 code와 standard 등과 같은 설계 및 시공 기준/표준을 확산시켜야 함.
- 물론, 수원국의 자연 환경 조건이나 기존 제도 등에 따라 다소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계와 시공에 우리나라의 표준/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다면 사업 수주시 우리 업체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현재 무상지원을 통해 인프라 시설이나 도시 등의 마스터플랜 등을 작성해 주는 것과 같이, 각종 설계 기준이나 표준 등의 구축 사업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수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무상지원을 통해 설계 및 시공 기준 및 표준의 상위 체계인 관련 법규의 제정을 유도하여야 할 것임.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